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의안 번호	6509
----------	------

제안연월일 : 2017. 3.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한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행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위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천명한 “어떠한 형태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국 스스로 법치와 국제 통상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위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룩한 정치·외교·경제적 신뢰관계를 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양국이 상호의존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그동안 인적교류, 교역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간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사드 배치와 무관한 각종 근거없는 무역제재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에 더하여 문화·인적교류에까지 광범위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과 교민, 그리고 중국을 여행 중인 한국 관광객이나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등 모든 한국 국민에 대한 사드 배치 관련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하여 한한령, 한국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관광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 행위로 사실상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음.

이는 국제법과 국제통상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그동안 다방면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간에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간의 긴밀한 우호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사드보복의 조속한 종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것임.